

2024.11.18.(월)

국가비상대비업무 및 물자동원 발전 방 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박 계 호

발표자 소개

● 교육

- 육군사관학교(1980), 영남대학교 대학원(2001, 행정학 석사)
- 충남대학교 대학원(2012, 군사학 박사), 이탈리아 육군대학(1994)

● 경력

- 육군 근무(1980~2012), 단국대학교 초빙교수(2013~2023)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평가위원(2019~2020), 정책자문위원(2023~현재)

● 연구분야 및 저서

- 연구분야: 국가위기관리, 국가비상대비업무(총무계획), 민방위/동원업무
- 저서



※ 위기관리 및 비상대비, 민방위, 동원 분야 논문 및 정책연구 등 40여 편

※ 북핵대비 정부연습, 전쟁비용 조달 및 전시예산 편성 책자 작성 중

순서

- I. 총력전(Total War)이란?
- II.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 총력전 사례
- III. 국가비상대비업무 개관
- IV. 국가비상대비업무 실태 및 발전 방향
- V. 물자동원업무 실태 및 발전 방향
- VI. 결론 및 제안

I. 총력전이란?(1/3)

개 념

-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국력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 수행하는 전쟁(Total War)
- ※외국: 정부 전쟁지원노력(War Effort), 국민 후방전선(Home Front) 지원활동
- 국내: 국가비상대비업무(총무계획)

총력전 태동 배경 및 발전

-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과 전쟁양상의 변화(18세기)
 - 가내공업에서 대량생산 및 소비체제로 전환
 - 철강생산 공법 및 기술 발전: 새로운 무기 출현, 대량의 무기와 탄약 생산 촉진
 - 증기기관 및 전신 발명: 대규모의 병력 및 장비, 물자의 신속한 이동 보장
 - 전략 및 전술 발전: 전쟁양상 변화 촉진, 국가적 역량 총동원 양상 전개
- Raymond Aron(프랑스, 1905~1983)
 - 남북전쟁(미국, 1861~1865): 세계 최초로 총력전 양상 출현
 - 제1차 세계대전(1914~1916): 총력전 양상 본격적으로 전개
 -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총력전 양상 절정에 도달

I. 총력전이란?(2/3)

총력전 이론

● Erich von Ludendorff(1865~1937, 독일)

-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 장군으로 참전,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러시아군 격멸
- 종전 후 독일 패배원인 분석, **國家總力戰**(Der Totale Kriege, 1935) 저술

구분	국가의 총수	국민의 정신적 단결	경제력
내용	국가지도자 능력 지도자의 역할	군대의 강약=국민의 정 신적 단결	재정능력, 전비조달 무기/탄약생산 능력 등

● 다카하시 하지메(高橋 甫, 일본)

-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배원인을 분석, **現代總力戰** 저술(1972)

구분	무력	정치전력	사상전력	경제전력
내용	상비군 -인적: 병력규모 -물적: 자원 등	사회와 정치구조 좋은 정치 전쟁지도	군대의 용기 국민정신 국민여론	국가능력(국토) 식량 등 자원 국민경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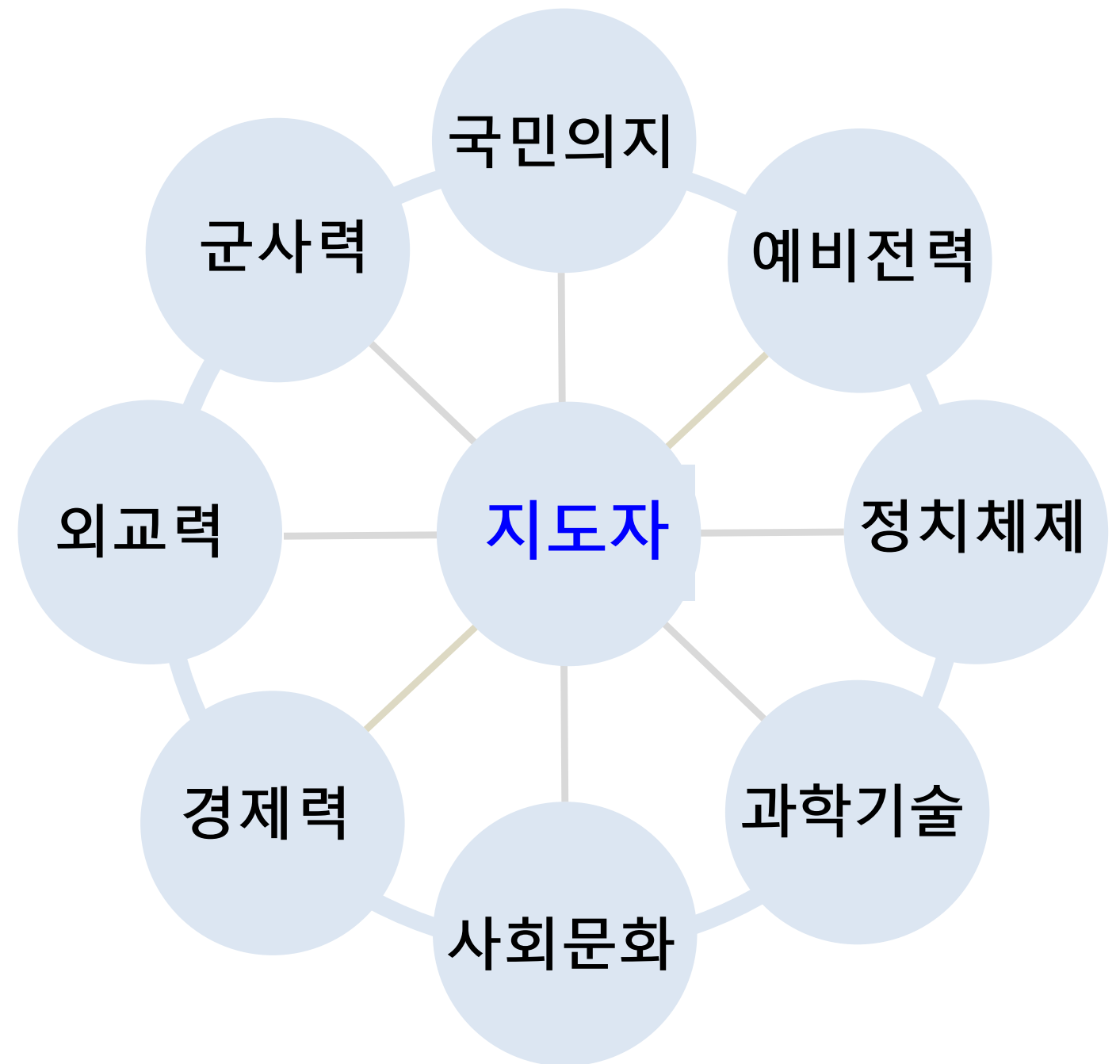
※ 현대적 의미에서 총력전 이론으로서는 미흡

I. 총력전이란?(3/3)

총력전 이론(계속)

- 합동기본교리(합동참모본부): 국가비상대비업무

구 분	내 용
지 도 자	전쟁지도 역량+리더십
정치체제	입법 제도적 지원
외 교 력	대외적 외교능력
군 사 력	상비군 규모, 전투력
경 제 력	재정 및 경제능력
예비전력	인적+물적 동원능력
국민의지	무형적 국민의 힘
과학기술	과학기술 지적 능력
사회문화	국민적 단결 분위기



II.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 총력전 사례(1/7)

제1차 세계대전(WW1)은?

● 전쟁원인

- 아시아~아프리카에서 식민지 경쟁
- 영국-독일 군비경쟁(해군력, 建艦競爭)
- 오스트리아-헝가리 황태자 암살(1914.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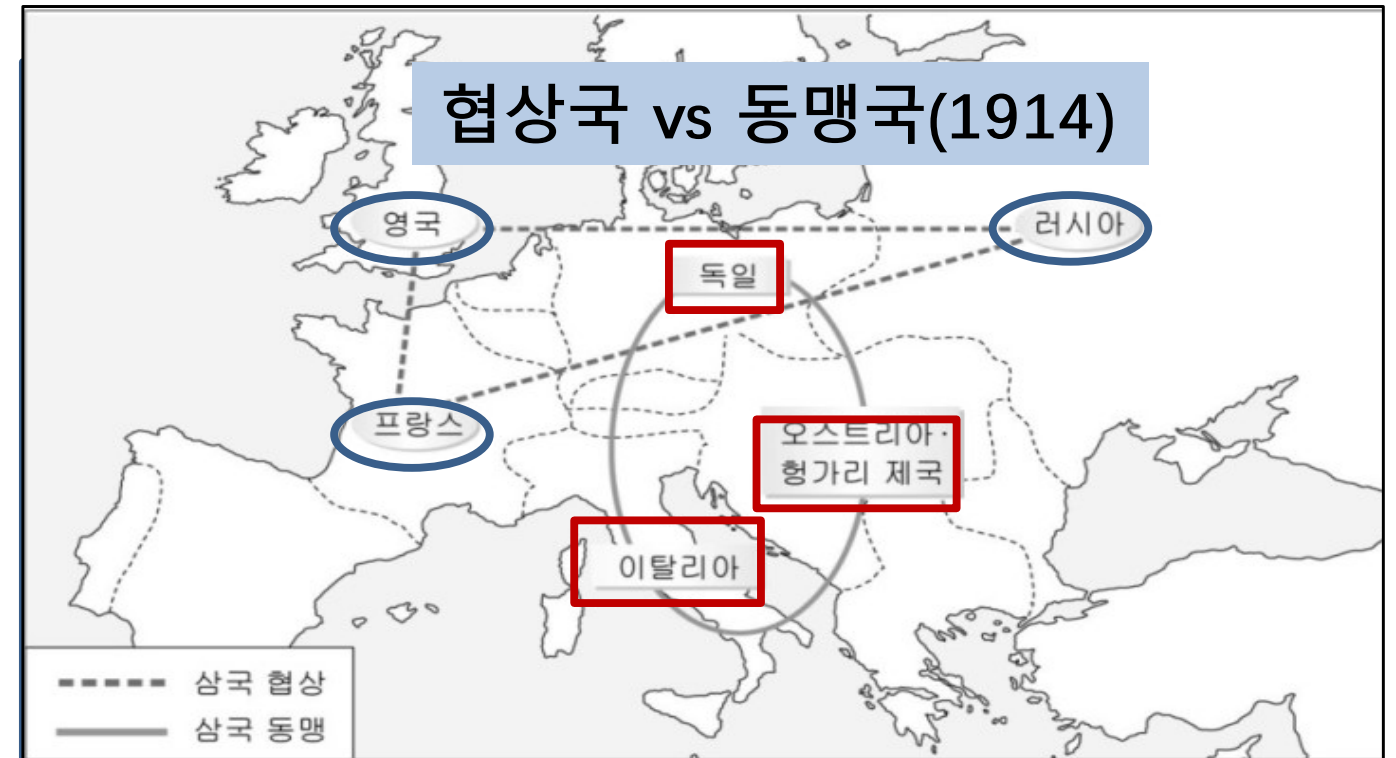
※ 3국 협상국 : 3국 동맹국의 대립

● 전쟁발발/경과

- 전쟁시작:1914.7.28
- 미국참전(1917.4), 러시아 이탈(1918.3)
- 독일 항복:1918.11.11

● 주요 활용무기

- 신형 함정(드래드노트급 전함), 잠수함
- 전차, 항공기(정찰용, 제한된 폭격 등)
- 화학무기 등



오스트리아-헝가리 황태자 암살(사라예보, 1914.6.28)

II.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 총력전 사례(2/7)

주요 작전지역



기간: 1914. 7. 28~1918. 11. 11(4년 3월)
참전국: 협상국(프랑스 외) vs 동맹국(독일 외)
피해: 사망(2,000만여 명), 부상자 다수
결과: 협상국 승리(영국, 프랑스, 미국 등)
※ 총력전 양상의 본격적 전개

II.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 총력전 사례(3/7)

전쟁의 결과

- 협상국 승리로 종전:1918.11.11,11:00시
 - 베르사유 조약 체결:1919.6.28
 - 전쟁배상금:1,320억 마르크(약330억 달러)
 - 병력 상한선:10만(육군+해군)
 - 잠수함 및 항공기 보유 금지
 - 징병제 및 참모본부 폐지
 - 대포(5,000문), 항공기(25,000대) 등 인계
 - 알자스-로렌 반환(독일→프랑스)
 - 폴란드 및 체코, 헝가리 등의 독립 등 승전국 프랑스, 독일에 굴욕적 항복 강요
- ※포슈: 베르사유 조약은 20년 휴전에 불과
처칠: 베르사유 조약은 우매한 일

.....



II.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 총력전 사례(4/7)

제2차 세계대전(WW2)은?

● 전쟁원인

- 히틀러 등장 이후 독일 재군비 선언
- 일본 군국주의 팽창욕
(1931 만주사변, 1937 중일전쟁)

- 국제연맹의 무능력

● 전쟁발발

- (유럽)독일군 폴란드 침공:1939. 9. 1
- (아시아-태평양)일본군 진주만 기습:
1941. 12. 7.

● 주요 활용무기

- 항공모함
- 전투기, 폭격기, 로켓무기
- 핵무기(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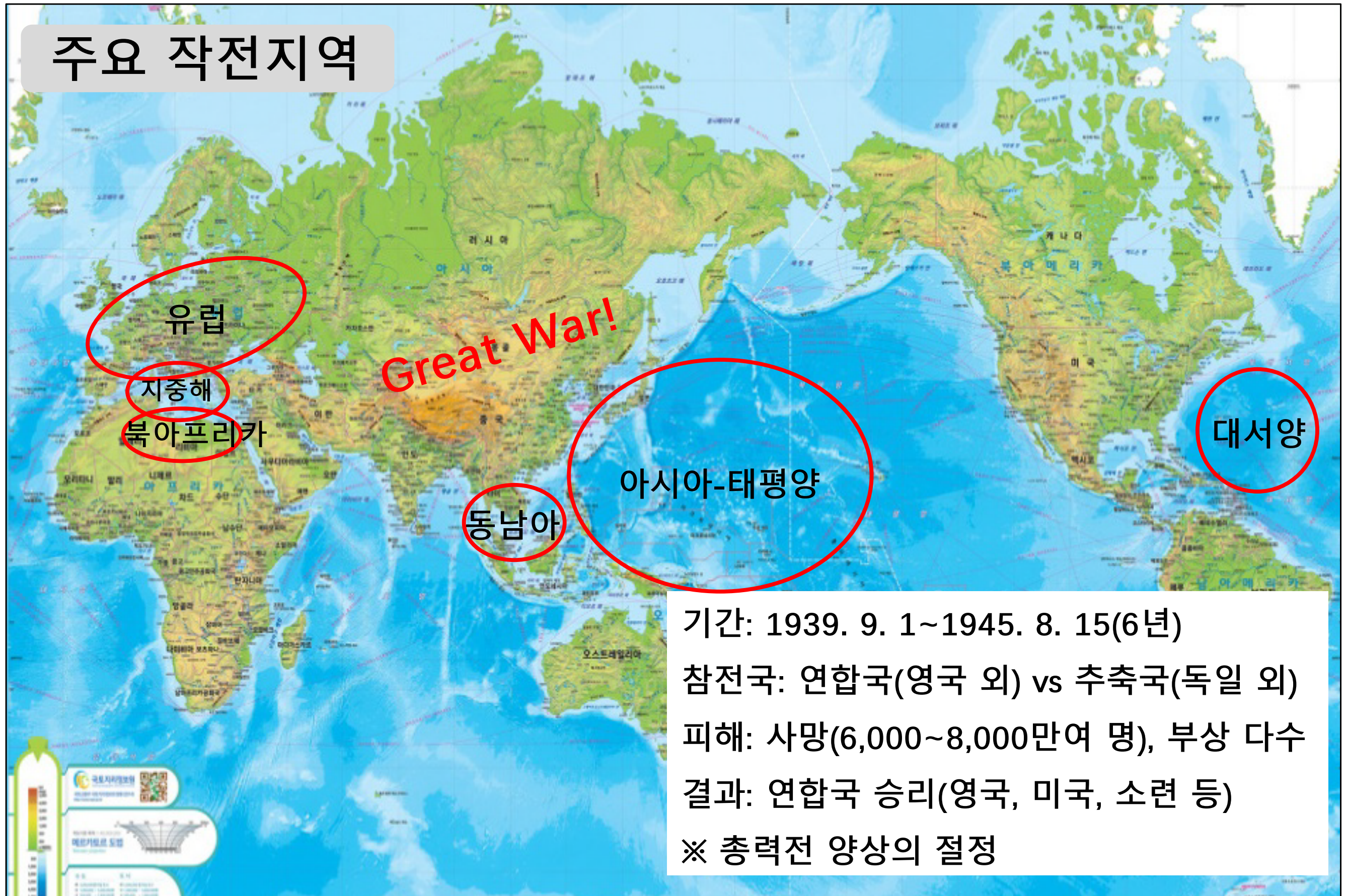
독일군 폴란드침공:1939.9.1



일본군 진주만기습:1941.12.7

II.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 총력전 사례(5/7)

주요 작전지역



II.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 총력전 사례(6/7)

전쟁의 결과

- 연합국의 승리: 제국주의 종언
 -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제국주의 소멸
- 국제연합 창설을 통한 국제평화 유지노력
 - 국제연맹의 실패 경험을 통하여 더욱 강력한 국제기구 창설 및 국제 평화 유지 역할 시작
- 양극체제의 성립과 냉전(Cold War)의 시작
 - 전후 미국과 소련이 강대국으로 국제질서 주도
 - 미국: 마셜 플랜(Marshall Plan)으로 유럽지역 공산화 방지(경제지원),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창설
 - (구)소련: 유럽지역+아시아 지역에서 공산화 확대
 - 동유럽지역 공산화: 동독,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등
 - 아시아 지역 공산화: 북한, 중국, 북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Ⅱ.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 총력전 사례(7/7)

총력전 주요 사례

구분	정부(War Effort) 활동	국민(Home Front) 활동
개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범정부적 법적·행정적 조치와 활동	전쟁수행을 위한 정부의 범정부적 조치에 대한 국민의 참여활동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제정 및 정부조직 확대 •동원(인력, 물자) •전쟁비용의 조달 •배급제 시행 및 농산물 생산확대 •여성인력 활용 •자원재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원참여(군사부분, 산업현장) •전쟁비용의 조달 참여 •농산물 생산 증대활동 참여 •여성 및 예비역 등의 참여 (군사부분, 산업현장) •자원재활용 참여 •----

※ 정부(War Effort) 및 국민(Home Front) 활동은 비군사 범위의 활동

- 이는 우리나라에서 국가비상대비업무와 유사한 활동이며
- 전시 정부기능의 유지, 국민생활의 안정유지, 자원 동원 등의 내용을 포함
- 정부 및 국민의 지원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국이 승리한 것임

1. 법령 제정과 정부조직 확대(1/2)

법령 제정

- 제1차 세계대전(1914.7.28.~1918.11.11.)
 - 영국: 국토방위법, 국민등록법, 전쟁물자법, ---
 - 미국: 국가방위법, 방첩법, 철도관리법, 선택복무법, 선동죄법, ---
 - 독일: 지원군법, ---
 - 제2차 세계대전(1939.9.1.~1945.8.15.)
 - 영국: 긴급권한법, 국민병역법, 방위비상권법, 군복무법, 수입/수출관세,--
 - 미국: 무기대여법, 해군확장법, 전략물자비축법, 선발징병법, 양성발주법, ---
 - 일본: 국가총동원법, 군수동원법, 병역법, ---
- ※ 모든 국가에서 전쟁 지원을 위한 각종 법령 제정: 전쟁수행 지원을 위한 강력한 법적 내용을 포함

1. 법령 제정과 정부조직 확대(2/2)

정부조직 확대

- 제1차 세계대전(1914.7.28.~1918.11.11.)
 - 영국: 식량성, 탄약성, ---
 - 미국: 연료관리국, 철도관리국, 식량관리국, 공보위원회, --
 - 독일: 최고전쟁청, 전쟁식량청, 전시 연료관리국, 원자재부,---
 - 제2차 세계대전(1939.9.1.~1945.8.15.)
 - 영국: 식량성, 항공기생산부, 전쟁생산부, 연료 및 전력부, 공보부, ---
 - 미국: 무기대여국, 경제안정국, 국가방위회의, 경제전쟁국, 전시해운청, 물가통제국, 전시노동국, 전시수송위원회, 전시생산위원회, 긴급관리국, 전시자원국, 전시유류관리청, ---
 - 일본: 기획청, 국세원, ---
- ※ 모든 국가에서 전쟁 지원을 위한 정부조직 창설 또는 확대

2. 병력동원(1/3)

세계대전시 병력동원

● 제1차 세계대전(1914.7.28.~1918.11.11.)

구 분	협상국(Triple Entente)			동맹국(Triple Alliance)	
국 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동원(만명)	950	380	820	1,325	900

● 제2차 세계대전(1939.9.1.~1945.8.15.)

구 분	연합국(Allies)			추축국(Axis Powers)	
국 가	영국	미국	소련	독일	일본
동원(만명)	512	1,230	1,250	1,020	609

※ 대부분의 국가는 평시 적정 규모 상비군 유지, 전시 대규모 동원의존

- 동원을 위하여 법령 제정, 동원관련 조직 등의 신설 또는 확대

- 전쟁 전-중전시 동원비교(참고#1), 총인구 대비 동원(참고#2) 참조

2. 병력동원(2/3)

1차 대전(영국)

● 동원현황

1914(개전시)	1918(종전시)
53만	950만

※ 전쟁장기화로 대규모 동원

● 동원 등을 위한 조치

- 모병제 → 징병제: 정치권 거부
- 징병제 채택: 동원, 징병여건 확립
- 국토방위법, 주민등록법 등 제정, 전쟁대비 동원 박차
- 원정군(BEF) 프랑스 파견
- 정부차원 동원홍보 활동 시행

※영연방 국가도 지원군 파견

홍보용 포스터



2. 병력동원(3/3)

2차 대전(미국)

- 1차 대전 당시 42개 사단창설, 종전 후 해체, 1939년 8개 사단(14만여 명) 유지
 - 1940년 징병제 도입, 부대 확장 시작
 - 선발징병법(1940. 9): 21~35세 남자 등록
 - 진주만 기습(1941) 당시 39개 사단으로 확장
 - 연도별 육군병력 확대(최대: 90여개 사단)
 - 종전까지 1,200만여명 동원(해군+해병대 포함)
- ※ 대규모 동원을 위해 다양한 홍보(참고#3) 전개
- 동원을 위하여 지역별 사무소 설치



3. 전쟁비용의 조달(1/5)

세계대전시 전쟁비용 사용

- 제1차 세계대전(1914.7.28~1918.11.11)

구 분	협상국(연합국)			동맹국	
국 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비용(억\$)	230	171	93	199	47

※ 전쟁비용 조달 방법: 조세, 채권, 은행권 발행 등 활용(참고#4)

- 제2차 세계대전(1939.9.1~1945.8.15.)

구 분	연합국			추축국	
국 가	영국	미국	소련	독일	일본
비용(억\$)	497	2,880	930	2,123	412

※ Raimondo Montecuccoli :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필요한 것이 돈이고, 둘째도 필요한 것이 돈이며, 셋째도 필요한 것이 돈이다.

3. 전쟁비용의 조달(2/5)

조세(1차 대전, 영국)

- **총괄: 약100억 파운드(230억 달러)**
 - 전비조달 수단: 조세, 발권, 차입 등
- **조세**
 - 소득세 인상: 6.25%(1914)→17.5%(1915)
 - 재산세 인상 및 대상확대
 - 새로운 항목 세금징수:음료수, 영화관람료 등
 - 물품세:시계, 악기, 수입자동차, 오토바이 등
 - 관세인상: 담배, 맥주, 건과일, 커피 등
 - 면세기준 하향조정:113만(1914)→200만(1920)
- ※ **전쟁 장기화로 전비소요가 급증하면서 매년 조세를 인상하여 전쟁비용 충당**
- **조세 외 수입**
 - 우체국 운용 및 전보통신 사용료 징수
 - 왕실소유 토지 활용 수입
 - 수에즈 운하 사용료 등

조세수입(1914~1918)

단위:백만 파운드

구 분	1914	1915	1916	1917	1918
계	163	189	290	514	613
관세	35	39	60	71	71
물품세	40	42	61	56	39
재산세	27	28	31	31	32
우표 판매세	10	6	7	8	8
토지세	0.7	0.7	0.7	0.6	0.6
가옥세	2	2	2	2	2
소득세	47	69	128	205	240
초과 이익세	-	-	0.1	140	220
토지 가격세	0.7	0.4	0.4	0.5	0.7

3. 전쟁비용의 조달(3/5)

은행권과 채권(1차 대전, 영국)

- **은행권 발행**
 - 통화 및 은행권법 제정(1914. 8):금 예치 없이 은행권 발행토록 법령으로 규정
 - 은행권 발행(1914~1918):3.23억 파운드
 - **채권 발행**
 - 전쟁비용 급증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채권발행
 - 다수 국민이 채권구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액권도 발행
 - 채권의 판매를 위한 다양한 방법 동원
 - 채권판매를 위한 홍보활동 병행
 - **기타**
 - 미국으로부터 차입:약 46억 달러(1914~1918)
 - 각종 기금 사용:우체국기금, 실업보험기금 등
 - 왕실토지 사용료, 수에즈 운하 사용료 등
- ※전비조달을 위한 홍보전개(참고#5)

채권판매(1915~1918)

구분	일시/기간	이율 (%)	발행 가격	총금액 (100만 £)	
계				2,962	
전시공채 (War Loan)	1차	1915.3	3.5	95	332
	2차	1915.6	4.5	100	592
	3차	1917.4	4~5	95~100	941
국고채권 (Exchequer Bonds)	1차	1915.3	3	95~100	48
	2차	1915.12 ~ '16.4	5	100	516
	3차	1916.10	6	100	161
전시채권 (War Bonds)	1917.10 ~ '18.10	4~5	100~100.5	372	

3. 전쟁비용의 조달(4/5)

조세(2차 대전, 미국)

- 총액: 3,970억 달러(1940.7~1946.6)
 - 조달방법: 조세(1,763억), 채권(2,207억)
 - 조세
 - 개인소득세 면제대상 축소: 1,300만→2,800만
 - 면세점 하향 조정: 기혼자(2,000→1,000달러), 미혼자(1,000→500달러)
 - 법인소득세 및 초과이익세 등의 인상
 - 소비세 부과: 주류, 담배, 음료수, 휘발류 등
 - 사치세 부과(예): 냉장고(300→450달러 인상)
-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납세자 확대:
400만 명(1940)→4,500만 명(1945)
- ※조세로 전비소요의 45%(1,763억 달러) 충당

1942~1945년 조세 징수(억 달러)

구분	1942	1943	1944	1945
개인 소득세	32	65	198	191
법인 소득세	47	97	148	160
초과 이익세	17	51	95	111
주류세	10.48	14.23	16.18	23.09
담배세	7.8	9.23	9.88	9.32
기타세	4.04	7.32	10.76	14.30
물품세 (소매상)	0.8	1.65	2.25	4.24
물품세 (제조사)	7.68	5.04	5.02	7.82

3. 전쟁비용의 조달(5/5)

전시채권(2차 대전, 미국)

- **전시채권(War Bonds) 발행**
 - 전쟁비용 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
 - 전쟁기간 중 8회의 전시채권 발행
 - 총 8,500만여 명 참가, 2,207억 달러 조달
 - 소액채권, 고액채권 등 다양하게 발행
 - 은행 및 우체국, 상점 등에서 판매
 - 육군 및 해군, 해병대, 전국출판협회 등 다양한 조직에서 채권구입 참여
 - 연방정부는 주정부에 채권판매 할당
 - 채권판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방송, 연예인 채권구입 캠페인 등
 - 범국민적 채권판매촉진 운동 전개
 - 채권판매 홍보용 책자 보급 등
- ※ 전시채권 종류 및 판매 홍보(참고#6~7)

채권판매(1942~1945, 억 달러)

구분	기간(슬로건)	목표	판매
1차	1942.11.30~12.23 (Keep' EM Flying)	90	129.4
2차	1943.4.12~5.1 (They give their lives, You lend your money)	130	185.5
3차	1943.9.9~10.1 (Back the attack-With war bonds)	150	189.4
4차	1944.1.18~2.15 (Sacrifice, Everyone to buy extra bonds)	140	167.3
5차	1944.6.12~7.8 (Back the attack-Buy more than before)	160	206.4
6차	1944.11.20~12.16	140	216.2
7차	1945.5.14~6.30	140	263.1
승리채권	1945.10.29~12.8 (They finished their jobs-Let's finish ours!)	110	211.4

4. 식량 수급 활동(1/2)

식량증산

● 식량수급의 중요성

- 전·평시를 막론하고 식량은 생존의 기본조건으로 대단히 중요
 - 식량부족은 국민사기 저하와 전쟁의지 좌절로 전쟁결과 중대 영향
-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패배는 식량부족이 주요한 원인의 하나
영국: 식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증산, 배급제 등의 정책으로 극복

● 식량공급 및 증산 등을 위한 주요 활동

- 생산증대 노력
 - 경작지 확보: 호수 메우기, 철로변 및 정원/운동장 활용 등의 개간
 - 영농 작업인원 확대: (특히) 여성인력 동원
- 해외수입확대 노력
- 배급제 도입
- 점령지역 식량 약탈(독일, 일본)

※식량생산 및 절약 홍보용 포스터(참고#9~10)

4. 식량 수급 활동(2/2)

배급제 시행

● 배급제(Rationing)란?

- 전시 식량 등을 절약 및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에게 식량을 지급

※식량 외에 피복 및 연료 등도 국가별 사정에 따라 포함

● 배급제 실시 배경

- 가용한 식량 등의 공평한 분배 및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 절약

● 배급제 적용 대상 품목

- 국가별 식량 등의 생산 능력에 따라 적용 대상에 차이 발생
- (일반적으로) 전 식량을 대상으로 적용

※그 외 연료 및 피복류도 국가별 상황에 따라 선택적 적용

● 배급제 적용 사례

- 영국: 대부분의 식품 적용+(연료+피복)
- 미국: 부분적 품목 제외+(연료 등)

※ 배급제 카드(참고#12) 및 홍보 포스터(참고#13)

5. 자원재활용(1/1)

자원재활용

● 자원재활용(Recycling)이란?

- 금속과 고무, 폐휴지, 식용유 수집, 무기와 탄약 등의 생산에 활용

● 배경

- 전시 무기 및 탄약 등의 수요는 급증하나 금속자원 부족
 - 특히 항공기 제작용 알루미늄, 화포/탄약 생산용 철강재 등
- 주석, 천연고무 수요는 급증하나 수입원 차단(일본군 말레이 점령)
- 각종 용지 공급의 제한(펄프)

● 주요사례

- 영국: 제1·2차 세계대전시 알루미늄 등 각종 금속 수거
- 일본: 제2차 세계대전 시 식기, 사찰의 종 등 금속 공출
- 미국: 제2차 세계대전시 알루미늄, 폐휴지, 고무, 식용유 수거

※자원재활용 홍보(참고#14~15) 및 물자절약 포스터(참고#16)

6. 여성의 역할(1/1)

여성 역할 증대

● 배경

- 전시 남성들의 대규모 동원에 따라 산업 및 영농현장에서 인력부족 심각(각국 공통 현상)
- 군에서 여성 인력 활용의 증가(간호, 보급, 정비, 통신 등)

● 국가별 여성 인력 활용 사례

- 영국: 여성영농부대(Women's Land Army, 영농작업 지원), 소방
군: WAAF(왕립공군), WRNS(왕립해군), ATS(지역복무),---
- 미국: 군수산업 현장 기능공 로지에(Rosie the Riveter: We can do it!)
군: WAC(육군), WAVES(해군), WASP(공군), ANC(간호),---

● 여성활용: 영농작업, 무기/탄약생산, 보급·정비·간호 등 군사업무 지원

※ 여성의 역할 관련 사진자료(참고#17~23)

7. 교훈(1/2)

- **전쟁수행을 위한 정부의 법적 및 행정적 조치(정부기능 유지)**
 - 전쟁지원을 위한 법령의 필요성
 - 평시의 법령만으로 전시 상황에 부합한 조치의 어려움
 - 전시 상황에 부합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위한 법령의 제정 등
 - 전쟁지원을 위한 정부기구의 적절성 검토
 - 평시의 행정조직만으로 폭증하는 전시상황에 대한 어려움 급증
 - 전시 행정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행정조직 확대 또는 신설 등
- ※ **전쟁기간 및 지원 필요성에 따라 법령제정과 정부조직 확대**
- **전시 국민생활 안정 노력 강구**
 - 식량의 안정적 공급노력 적극추진
 - 철저한 배급제, 식량절약 요리법 개발 및 홍보, 강제적 절약대책
 - 개인별 활동 고려 열량을 산정, 배급량 상이 적용
 - 전투원, 중공업 종사원 등에는 많은 양의 식량 배급
 - 학생, 사무원, 어린이, 환자 등에게는 적은 량의 식량 배급
 - 전 국토 경작지화(운동장, 공원, 미개간지 등) 등 식량증산 노력

7. 교훈(2/2)

● 전시 동원의 보장 노력 강구

- 동원을 위한 법령 제정 및 동원조직 신설, 가용자원 등록
- 동원 시 전투력 발휘 대책의 강구

※ 예비전력은 전쟁지속력 유지 및 승리의 핵심적 역할

★ 전쟁사의 총력전 결론

- 전투/군사작전의 승리가 반드시 전쟁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투/군사작전의 승리+전시 정부기능의 유지+전시 국민생활안정 유지+군사작전 지원 자원동원이 조화될 시 가능
-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투/군사작전의 승리는 물론 국가비상대비업무가 이를 보장해야 함

※ 국가비상대비업무=전쟁승리 지원업무=총력전 계획(총무계획)

Ⅲ. 국가비상대비업무 개관(1/7)

문제의 제기

- 한반도의 지정학적 취약성
 -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열강들의 세력 각축장소
 - 우크라이나 전쟁, 양안문제를 계기로 북·중·러 vs 한·미·일 대립 강화
 - 서북도서 취약성, 수도권은 휴전선부터 근거리 위치
- ※ 수도권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의 중심: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양상은?
 - 제한전, 국지전, 총력전---? 전 한반도 전장터+국제전 양상 비화 가능
 - 재래식 전력+대량살상무기(핵, 화학무기)+무인기+사이버전+ ---
- 전쟁은 군인만 한다? NO!!!
 - 정부와 국민이 전쟁수행의 핵심, 군은 군사작전 수행의 주체
- 궁극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정부+국민+군의 조화 매우 중요
 - 정부기능+국민생활 안정+군사작전 지원 동원의 중요성 인식

정부와 국민 및 군이 모두 참여하는 총력전 양상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Ⅲ. 국가비상대비업무 개관(2/7)

북한의 위협은?

● 북한군 위협 요소(2022 국방백서)

병력	전차	다련장 방사포	잠수함	항공기	예비군
128만	4,300	5,500문	70척	810대	762만

※ 화생무기: 2,500~5,000톤?

※ 핵무기: 플루토늄 70kg? HEU?

● 북한군 위협 양상

- 재래식전력+대량살상무기+사이버공격+ 테러+무인기+급조폭발물(IED)+ ---

● 북한군 군사전략

- 기습전(奇襲戰): 시간, 장소, 방법?
- 속전속결전(速戰速決戰): 기갑/기계화, 핵?
- 배합전(配舍戰): 전/후방 동시전장화?

※ 핵무기 사용 가능성?



Ⅲ. 국가비상대비업무 개관(3/7)

예상되는 전쟁양상은?

- 전쟁기간은?
 - 단기전 가능성: 북한 장기전 수행능력 취약?
 - 장기전 가능성: 중국+러시아 지원?
 - 전쟁양상은?
 - 재래식 무기 위주의 전쟁?
 - 재래식 전력+대량살상무기+사이버공격+테러+무인기+급조폭발물(IED)+---
 - 한국의 취약점은?
 - 휴전선~서울까지의 짧은 거리
 - 수도권에 정치, 경제, 군사, 인구 등의 집중
 - 도시지역 고층 아파트 거주 주민 다수
 - 대량살상무기 공격시 대비 준비, 방호 취약 등
- ※ 민방위 및 국가비상대비업무 발전 필요

전시 고층 아파트의 취약점은?



Ⅲ. 국가비상대비업무 개관(4/7)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 각종 자원동원 방해 활동 급증-사이버 공간, 시위행동 등
- 중앙정부-광역시/도-시·군·구의 상하간 업무 연계 어려움
- 각종 유언비어와 가짜뉴스 등의 난무 등 치안 질서 혼란
- 주민 후방지역으로 이동 시도- 전쟁수행 방해
- 은행 예금 인출급증, 생필품 사재기 및 매점매석 행위 등의 급증
- 혼란을 틈탄 해외도피 급증-국민의 항전의지 훼손
- 핵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으로 인명피해 급증할 가능성
- 기반시설 등의 피해 급격 증가-긴급복구 소요 급증
- 단전 및 단수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 급증, 다중시설 테러활동 증가
- ----

대량살상무기+재래식 무기 복합적 사용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예상

Ⅲ. 국가비상대비업무 개관(5/7)

국가비상대비계획(忠武計劃)

● 개념

-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자원의 동원을 통해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 **國家總力戰(Total War)**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전시대비 계획

● 목표는

- 유사시 신속히 **國家總力戰** 체제로 전환하여
 -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며
 - 민·관·군 소요의 적정한 배분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 전시 경제와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
- ※ 국민이 전쟁 수행의 주체로서 승리에 기여

Ⅲ. 국가비상대비업무 개관(6/7)

주요내용

●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자원동원

- 인원동원: 병력동원, 기술인력동원, 전시근로소집
- 물자동원: 산업동원, 수송동원, 건설동원, 통신동원

● 정부기능 유지

- 주민 및 차량이동 통제, 접적지역 주민 철수 및 수용, ---
- 전시행정체제 전환, 충무시설 운용, 기관 창설 및 통합, 전시경제 운용, --

● 국민생활 안정 유지

- 식량 등의 배급제 시행, 단전 및 단수 대비, ---
- 전상자 치료, 전재민 구조 및 구호와 수용, 국민생활 안정 저해 단속, ---

※군사작전은 한미동맹체제 연합작전으로 시행

국가비상대비업무는 민방위업무와 더불어 정부 책임하 시행(고유업무)

Ⅲ. 국가비상대비업무 개관(7/7)

국가비상대비계획 구조

구 분	작성부서	내 용
기 본 지 침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5년 단위 작성
기 본 계 획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집행계획 작성 지침 등
집 행 계 획	행정각부 (비상안전기획관실)	시행계획 작성 지침 등
시 행 계 획	시·도 및 특별행정기관	실시계획 작성지침 등
실 시 계 획	시·군·구 및 업체	자체 실시계획

- 하급기관에서 작성 후 상급기관 승인을 얻어 확정, 작성시 연계성 유지 중요
- 평시 정부연습을 통해 계획의 적절성 및 시행 준비태세 점검
- 충무사태 선포이후 시행

IV. 국가비상대비업무 실태 및 발전 방향(1/2)

국가비상대비업무 평가

- 1968년 1·21사태를 계기로 국가비상대비업무를 시작한 이래 55년여 경과
 - 국가비상대비 계획(총무계획)의 최초 작성 시작: 1968. 2. 27
 - 국가비상대비 연습(태극연습)의 최초 실시: 1968. 7. 5~7
 - 국가비상대비 조직(비상기획위원회)의 설치: 1969. 3. 24
- ※외형상 국가비상대비업무는 어느 정도 체계적 시행 중
- 현재 국가비상대비능력은 대북 절대우위 유지
 - 인구는 북한대비 2배, 경제력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세
 - 국력의 모든 면에서 대북우위로 전쟁지속면에서 우위 유지
- 반면에, 현재 국가비상대비업무는 정체, 발전을 위한 모멘텀 절대 필요
 - 국가비상대비업무에 안보논리가 아닌 정치·경제·행정 논리로 접근
 - 북한 위협은 지속 악화되었지만 비상대비조직은 지속적 약화
 - 비상대비계획은 전쟁 전단계를 망라하지 못하는 계획으로 작성
 - 북핵이 대한민국 안보의 제1위협 요인이나 비상대비 차원 대비지연
- ※전쟁은 국력의 싸움으로, 단순히 국력만 보면 전쟁발발 시 한국 승리
다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승리하기 위하여 제반 문제점 개선 필요

IV. 국가비상대비업무 실태 및 발전 방향(2/2)

과업#1 : 전시대비 법령 검토

과업#2 : 국가비상대비 조직 강화

과업#3 : 국가비상대비 계획 개선

과업#4 : 사태조치목록 개선(예)

#4-1 : 전쟁비용 조달

#4-2 : 전시예산 편성

#4-3 : 배급제 시행

#4-4 : 자원인력 활용

#4-5 : 복핵대비 계획작성 및 정부연습

#4-6 : 동원해제 및 복원계획 작성

#4-7 : 충무사업 확대

※전쟁의 진행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업 위주 일부 제시

과업#1 : 전시대비 법령 검토

법령 검토

● 필요성

- 북한의 위협, 전쟁양상 등의 변화에 따른 법령의 제한사항 해소 필요(참고#23)
 - 위기관리 및 대응을 위한 법적 취약성 등 문제점 해소
 - 북핵 등 대량살상무기 대비 법령의 제정 필요
- ※북한군의 다양한 위협대비, 신속한 대응을 보장할 법령 필요

● 실태/문제점

- 안보상황은 위기발생 시 신속대응을 요하나 법적 미비 등으로 곤란
 - 한반도는 전쟁발발시 급속히 전면전으로 확대와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 높음
- 핵·WMD 공격을 받을 시 광범위한 지역에서 인명 및 시설 등의 피해 발생, 피해 최소화 및 조기복구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 통합을 위한 법령 필요
- 한반도 안보환경 및 예상되는 전쟁양상 고려 시 위기관리 및 비상대비와 관련 되는 법령은 최단시간에 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방안

- 총무사태 선포 등을 규정하는 법령 제정(위기관리 관련 법령)
- 북핵 등 대비, (가칭) 북핵·WMD 대응에 관한 법률(또는 대통령 긴급명령) 제정
- 개별 법령의 문제점 개정 등

과업#2 : 국가비상대비 조직 강화

비상대비조직 강화

● 필요성

- 전쟁은 군사부분과 비군사부분의 협력으로 진행
- 제1·2차 대전에서 승리한 국가를 보면 군사부분 외 비군사부분 역할 중요
 - War Effort(정부), Home Front(국민) 지원 활동
- 북한의 시대별 위협양상 변화(참고#27)에 따른 적절한 대응력 강화

● 실태/문제점

- 북 위협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악화, 비상대비조직은 지속적 약화(참고#28)
 - 비상기획위원회(장관급)-비상기획위원회(차관급)-비상대비정책국(국장급)
 - 현재의 비상대비조직은 다양화되는 안보위협 대비, 대응역량 제한
 - 변화하는 위협 대비 비상대비 조직 강화 지속 제기되었으나 관심 결여
- ※핵·WMD,재래식 위협, 사이버, 무인기 등 위협 다변화 대비, 조직강화 필요

● 방안

- 비상대비 조직의 보강(참고#29)
 - 국가비상대비처, 비상대비실, 비상대비본부 등 다양한 의견 제시
- (병행하여) 세종시에 위치한 비상대비정책국 과천으로 이동 검토
 - 평시 문서고 관리, 충무사태시 정부의 신속한 대비태세 전환 보장

과업#3 : 국가비상대비계획 개선

총무계획 작성 개선

● 필요성/사례

- (방어적 입장) 전쟁은 전쟁이전(임박)~개전 및 방어~반격 및 격멸~종전 및 전후처리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인 전쟁의 진행임
-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전쟁은 위와 같이 진행(참고#30)

● 실태/문제점

- 한반도 전쟁발발 시 전쟁기간에 상관없이 위의 전쟁단계로 진행(참고#31)
- 현재는 주로 전쟁이전~개전 및 방어단계 위주로 총무계획 작성
- 따라서 반격 및 격멸단계 이후로 전환시는 여러 어려움이 예상됨

※평시 반격단계 이후 예상상황을 감안, 계획작성 필요

● 방안

- 전쟁지도지침 등에 맞춰 전쟁 전쟁단계에 부응하는 계획 작성(참고#32)
 - 비상대비환경 분석과 가정 및 전쟁양상 연계, 한국적 상황 고려
- 국방부 집행계획 및 시행계획의 작성 개선 등 병행 추진

과업#3 : 국가비상대비계획의 개선

국방부 집행계획

● 실태/문제점

- 국방부는 군정을 수행하는 기관이자 정부의 한 부처
 - 정부의 한 부처로 국방부 전시업무 수행을 위한 집행계획 작성 필요
 - 현재는 타 부처 동원계획(병력, 전시근로, 기술인력, 물자) 종합 수준 불과
- ※ 전시 국방부와 타 행정부처간 무엇을 협조할 것인지 기록된 계획작성

● 개선방향

- 기본지침 및 기본계획에 국방부 집행계획 작성 지침 포함
- 국방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
- 집행계획 작성시는 전쟁단계 및 행정부처간 협조사항 등을 반영
- 현재의 동원계획은 집행계획 부록으로 첨부

※ 집행계획 포함사항(예)

- 국방부가 당면할 비상대비환경 및 단계별 가정
- 전쟁단계별 국방부 조치계획(전쟁이전/임박~종전 및 전후처리 단계)
- 행정각부별 협조 사항 등

과업#3 : 국가비상대비계획의 개선

시행계획

● 실태/문제점

- 전쟁단계별 전·후방 지역이 당면할 환경은 상이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지역별 비상대비환경 분석 및 가정 설정하 시행계획 작성 필요
- 현재는 집행계획 복사 수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시행계획 유지
- ※광역자치단체 지역에서 전시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 등의 미흡

● 개선방향

- 수도권 및 후방지역 정보판단, 비상대비환경 분석과 단계별 가정설정
 - 비상대비 환경분석 및 가정은 시행계획 작성 시 긴밀 연계
- 전쟁단계별 집행계획 지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할 업무사항 작성
 - 집행계획 지침에 따라 가정연계, 광역단체장 업무를 보다 구체적 작성
- 자치단체 업무 작성시 광역단체 업무, 기초자치단체 업무 구체적 구분
- 비상대비환경의 분석과 가정이 연계되는 계획이 되도록 분석 철저
- ※집행계획 작성 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 명확히 제시(사태조치계획)
- 시행계획 수정을 위한 비상대비정책국 표준안 제시방안 검토

과업#4 : 사태조치목록의 개선(예)

사태조치목록

● 총무3~1종 선포시 행정각부의 사태별 조치할 과업목록

- 과업구분: 핵심과업, 중요과업, 일반과업
- 핵심과업: 전쟁의 진행 및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과업

정부기능의 유지	국민생활의 안정유지	군사작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무시설 운용 유지 ·전쟁비용의 조달 ·전시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전략물자의 조달 ·핵심기반시설 유지 ·반정부/반국가 활동 억제 ·주변국 북한 지원 억제 ·동맹국의 지원 획득 ·수입/수출여건 보장 ·북핵하 정부기능 유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량 등의 안정적 공급 ·생필품의 안정적 공급 ·단전 및 단수 시 조치 ·강력사건의 예방 ·대량피해 발생시 조치 ·전재민/피난민 수용 및 지원 ·접적지역/서북도서 주민철수 ·유언비어 등의 단속 ·북핵하 국민생활 안정유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병력동원 여건 보장 ·산업동원 여건 보장 ·동원거부 및 기피 단속 ·미 증원군 등의 지원(비용) ·예비군동원 방해 제재 ·군사작전 방해활동 제재 ·북핵하 자원동원 ·동원해제 및 복원 등

■ 계획의 구체화 및 융통성 있는 적용

- 주무부처: 주무부처 조치사항 및 협조부처에 요청할 사항 구체적 포함
- 협조부처: 주무부처의 요청에 대한 협조부처 조치사항 구체적 포함
- 협조부처는 해당 총무계획에 해당부처가 협조할 사항 반드시 포함

과업#4 : 사태조치목록의 개선(예)

#4-1:전쟁비용 조달

● 필요성

- 전쟁은 대규모의 병력동원 외에 막대한 전쟁비용을 필요로 함
- 한반도 전쟁시 병력유지, 장비/탄약 구입 등으로 막대한 비용소요 예상
- 전쟁비용 조달을 위한 가용한 수단 및 방법에 대한 검토 및 계획 필요

※영국에서는 이용 가능한 모든 출처에서 전쟁비용 조달(참고#33)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가능 이유: 미국과 서방국가의 전비지원 때문

● 실태/문제점

- 전비조달을 위해서는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에 대한 검토 및 계획 필요
- 현재 전쟁비용 조달을 위한 계획 미흡한 것으로 판단

● 방안

- 전비조달 출처 검토: 조세, 채권, 은행권, 연기금, 외환보유액 등(참고#34)
- 전비조달 가능한 출처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전시 사용계획 수립
- 주관부처 및 유관기간 간 필요한 협의문 작성 등

과업#4 : 사태조치목록의 개선(예)

#4-2:전시예산 편성

● 필요성

- 전시예산은 정부의 전쟁수행 의지의 표현
- 총무계획 3대기능 유지를 위해 전시사업 및 막대한 피해복구예산 필요

● 실태/문제점

- 전시예산 편성과정에서 지침 미 준수, 관심 미흡
- 많은 부처 및 자치단체가 평시 예산항목을 전시예산으로 편성(참고#36)
 - 평시 예산항목과 전시 예산이 필요한 예산항목은 매우 상이
 - 현재의 전시예산으로는 전쟁수행간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 예상

※법령 규정 및 총무계획 3대 기능 시행에 필요한 예산항목 선정 미흡

● 방안

- 기재부/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시 상황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참고#37)
 - 전시업무에 필요한 예산 발굴 및 편성: 법령규정+총무계획 시행예산
- 예산 편성기관은 충분한 검토 및 심의 과정 준수, 예산편성(참고#38)

과업#4 : 사태조치목록의 개선(예)

미 증원군 등의 지원예산 편성

● 6·25전쟁 당시의 사례

- 근거: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간의 국제연합 가맹국 연합군 총사령관 휘하 부대에 대한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UN貸與金)'
- 조달: 한국은행권 발행

연도	계	1950	1951	1952	1953	1954
금액(환)	222.26억	5.48억	36.23억	55.53억	80.24억	44.78억

※ 당시 통화증발 요인의 70% 점유, 인플레이션 야기로 국민고통 초래

● 미 증원군 등의 지원예산 편성

■ 필요성

- 6·25전쟁 당시 가혹한 경제상황에서도 유엔대여금 지출한 사례 감안
- 한국 방위에 대한 한국의 책임 수행

■ 방안

-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간 논의를 거쳐 잠정규모 판단
- 전시예산 계획에 반영

■ 적절성 검증: 을지연습 시 핵심적 과제로 관련부처 논의

※ 미 증원군 등 국제지원군이 한국지원 시 한국정부 예산지원 불가피 인식

과업#4 : 사태조치목록의 개선(예)

#4-3:배급제 시행

● 필요성/사례

-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은 26% 수준으로 전쟁 장기화시 심각한 우려 예상
 - 전시 식량부족은 전쟁의 진행 및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패전 주요 이유중의 하나는 식량부족임
영국도 식량자급율이 36%로 전시 심각한 식량부족 문제에 직면함

● 실태/문제점

- 총무사태 선포이후 정부는 배급제를 시행할 계획임
- 배급제 시행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막대한 행정소요와 예산준비 등 필요
-모든 품목을 일시 시행하기보다는 국내 생산능력 고려 품목선정 필요
-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배급대상자 여건 고려, 기준상이

● 방안

- 국내 생산능력 및 유통량 고려, 품목별 배급시기 상이 적용(참고#39~40)
- 배급대상자 여건에 따라 배급량 기준 판단 및 적용, 전쟁장기화 대비

과업#4 : 사태조치목록의 개선(예)

#4-4:자원인력 활용

● 필요성

- 전시 군 및 정부업무 지원 등을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
 - 군 업무지원(보급, 정비, 간호, 행정 등), 행정관서 업무 지원 등
- ※ 1·2차 대전당시 모든 교전국에서 다수의 남성 및 여성 지원활동 참여

● 실태/문제점

- 전시 총무계획 시행 지원을 위해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사상자 수습 및 간호, 배급제 시행 인력 지원, 중요시설 방호 등
- 현재는 남녀 자원인력 운용소요 및 근무위치 등의 미 판단 등 관심 저조
- 전시 민간인력 활용 관련하여 이념적 접근으로 정치 쟁점화 현상 발생
- ※ 학생호국단 편성 관련 정치 쟁점화 발언(2018, 박00의원 등)
- ※ 최근 Senior Army 현상 주목, 국가위기사 자원인력 참여 기반 준비필요

● 방안

- 전시 자원인력 소요판단 및 운용 지침 수립(행정안전부)
- 자원인력운용 지침에 따라 자원인력 운용 소요판단(행정기관, 참고#41)
- 자원인력 운용계획 수립(집행계획~실시계획)
- 정부연습시 운용계획 및 직위 등의 적절성 검토 등

과업#4 : 사태조치목록의 개선(예)

#4-5:북핵대비 계획작성 및 정부연습

● 필요성/사례

- 북핵은 안보위협외의 제1요인으로 군사 및 비군사분야 동시대비 필요
 - 군사분야는 3축 체계, 확장억제, 전략사령부 창설 등으로 대비 중
 - 비군사 분야는 군사분야보다 늦게 계획작성 및 정부연습 등을 실시 중
 - 핵 피폭시 대규모 피해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차원 계획 필요
- ※히로시마 대규모 피해원인: 핵무기 특징 외 정부조치 부실(참고#42~44)

● 실태/문제점

- 북한군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평양-서울 공격시 2분 안에 도달(참고#45)
 - 신속하게 경보 및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체계, 대피시설 발전 필요
- 북핵대비 군사~비군사 분야가 연계된 계획작성과 정부연습 필요
 - 광범위한 피해 감안, 안보실-행정부-자치단체 연계 계획, 연습 미흡
 - 핵상황을 극복할 장비 및 약품 등의 준비 미흡

과업#4 : 사태조치목록의 개선(예)

#4-5:북핵대비 계획작성 및 정부연습(계속)

● 방안

- 북핵공격 대비, 민방공 경보체계 보완(참고#49)
- 핵폭발 시 현상, 히로시마 사례, 북핵위협 고려 계획작성(참고#46~47)
 - 안보실, 행정각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의 임무 및 역할 우선 규정
 - 총무계획 개선상의 모든 기관 연계 계획작성(안보실~기초자치단체)
 - 정부연습 시 안보실-행정부-광역자치단체 연계, 동시통합 연습시행
- 정부연습 결과, 장비 및 물자 부족소요 판단 및 준비(참고#50)
 - 대상: 화상치료약품, 방사선/방사능 계측기, 인명구조 및 이송 장비 등
 - 총무사업: 평시 예산에 반영하여 구입
 - 전시예산: 총무계획 예산에 반영, 총무사태 선포이후 구입
 - 산업동원계획: 전시 생산하여 확보

※핵피폭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고려, 안보실~자치단체 연계 계획작성 및 정부연습 실시, 북핵대비 장비 및 물자 등의 준비 필요

과업#4 : 사태조치목록의 개선(예)

#4-6:동원해제 및 복원

● 개념

전시 동원된 인원과 물자, 시설, 업체 등을 평시 체제로 전환하는 절차와 활동

※전쟁목적 또는 종전조건 달성 시 동원되었던 자원의 평시체제로 전환

● 필요성/사례

- 군은 전시 대규모 예비군, 수십만 대의 수송장비 및 건설기계, 업체 등을 동원, 종전시는 동원해제 및 복원을 통해 평시상태로 전환해야 함

※미국: 2차 세계대전시 1,200만 동원, 종전이후 동원해제 및 복원시행(참고#51)

-정치권 조기해제 요구와 군의 반대, 의회 예산삭감으로 전투력 저하 등 난제 직면

● 관련법규

병역법 및 시행령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병역법 48조(병력동원 소집 사람 복무) -병력동원 소집해제 대통령령으로 규정 병역법 시행령99조(병력동원 소집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병력소집 해제 ·전시사변이 끝날 때 ·동원령이 해제될 때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9조(동원명령 해제 및 복원) -주무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동원해제 ·대통령이 국가동원 해제 선포 ·동원실시기간이 종료 ·동원요청기관장의 동원해제 요청 -동원해제시 지체없이 복원 실시

과업#4 : 사태조치목록의 개선(예)

#4-6:동원해제 및 복원(계속)

● 실태/문제점

- (한반도가 통일되었다는 가정하) 종전이후 동원해제 및 복원환경 전망
(지형 및 기상) 북한지역의 험준한 산악 및 악기상 등으로 복원소요 급증
(북한상황) 공산세력 소멸 후 잔여세력의 부분적 저항 지속
(아군상황) 한반도 통일이후 군의 재배치 등의 시행
(기반시설) 도로 및 공항, 항만 등의 파괴, 복원을 위한 긴급복구 소요 급증
(기타) 종전이후 복구소요 급증
정치권 및 언론 등에서는 종전을 이유로 신속한 동원해제 요구 등

-현재 정부 및 군은 동원령 선포 시 자원의 동원에만 관심, 이후 과업 관심 미흡

-종전이후 동원해제 및 복원은 필연적 과정이자 지난한 과업으로 평시계획 필요

※미군교범: 동원해제 및 복원은 동원보다 더 어려운 과정, 평시에 계획 발전 필요

● 방안

- 기본계획: 동원해제 및 복원관련 지침, 행정부별 임무 및 역할(비상대비정책국)
- 집행계획: 행정각부별 동원해제 및 복원업무 관련 임무 및 역할, 시행계획 포함
- 각군본부/작전사: 동원운영계획에 동원해제 및 복원업무 시행계획 등을 포함
- 정부연습: 핵심적 과제로 포함하여 연습실시

※동원해제 및 복원은 동원보다 더 어려운 과업으로 평시 관심 및 계획발전 필요

과업#4 : 사태조치목록의 개선(예)

#4-7:충무사업 확대

● 개념

전시 대비 전쟁초기 소요되는 주요 물자 비축 등 능력화장 위한 평시 예산 사업

● 필요성

- 핵·WMD, 재래식 무기 위협 심각성 대비, 피해발생시 최소화를 위한 대책 필요
- 평시 예산반영으로 장비와 물자 비축확대, 연구개발 등으로 비상대비 능력 확충

● 사업유형

- 장비 구입 및 물자비축, 시설 방호 및 확장, 자원조사, 연구개발 등
- 특히 핵·WMD 및 재래식 무기 위협 대비 장비 및 물자 비축, 방호시설 연구 필요

● 실태/문제점

- 적용기관: 행정부만 적용 중,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등은 제외
- 적용품목: 행정부별 판단내용 반영 중, 전시 상황과 연계성 검토 필요
- 사업예산: 소액 반영으로 행정부 전시대비 역량 강화 미흡

● 개선방안

- 사업기관 확대: 행정부 위주→행정부,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 사업내용 다양화: 물자구입 위주→장비개발, 물자/약품 구입, 시설 방호 연구 등
- 사업예산 및 품목확대: 기관별 정규예산 증액, 전시 예상상황 반영 품목 다양화

V. 물자동원업무 실태 및 발전방향(1/6)

동원업무 개관

● 개념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시 인적·물적 자원 등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및 관리, 운용하는 정부의 법적 및 행정적 활동 또는 행위

● 대상자원

구 분	동원대상(담당부처)
인원동원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국방부/병무청), 기술인력동원(행안부)
물자동원	산업동원(자원관리주무부), 수송/건설동원(국토부), 통신동원(과기부)
기타동원	재정경제동원(기재부, 행안부), 홍보매체동원(방통위)

● 동원시기(물자동원의 경우)

- 초기단계: 1개월(M~M+30일/ 1~4단계)
- 정상동원: 11월(M+31~M+364/4~12단계)

● 동원계획

- 정부: 총무계획(집행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 군: 동원운영계획(병력, 전시근로, 기술인력, 산업, 수송, 건설, 통신동원 등)

V. 물자동원업무 실태 및 발전방향(2/6)

물자동원

● 개념

전시 소요되는 물자, 장비, 시설, 업체 등의 자원을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통제 및 관리, 운영하는 정부의 법적 및 행정적 활동 또는 행위

● 대상자원

구 분	동원대상
산업동원	양곡, 유류, 피복, 탄약, 공산품, 병원, 신문사 등 물자·장비 및 업체 등
수송동원	장비(자동차, 선박, 항공기), 업체(운송 및 하역, 정비업체)
건설동원	건물/토지, 장비 및 정비업체(건설 및 건설기계)
통신동원	통신회선, 공사업체

● 특징

- 장비 및 물자,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동원
- 군사작전과 작전/전쟁지속능력 유지 핵심: 전시 군소요 의존도 60%이상
- 평시 사용하는 자원의 동원 및 새로운 생산을 통한 동원
- 물자동원 차질 발생시 작전/전쟁지속 및 피해회복의 어려움 발생 우려

V. 물자동원업무 실태 및 발전방향(3/6)

물자동원 영향요소

● 북한군 위협양상

- 군사전략(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 단기간 전쟁/한반도 전역 전장화
 - 핵·WMD+재래식 무기 현대화: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
 - 전쟁양상: 한반도 전지역의 전장화
- ※대규모 인명살상 및 파괴를 동반하는 다양한 모습의 전쟁

● 최근의 전쟁양상

- 우크라이나 전쟁: 기습전, 전쟁 장기화, 드론 게임체인저 역할, 탄약소요
 - 이스라엘-하마스/헤즈볼라 전쟁: 기습전, 전쟁 장기화,
- ※기습전 양상 및 전쟁 장기화, 새로운 장비의 게임 체인저 등장 등

● 동원역량

- 수송 및 건설, 통신동원: 동원소요 대부분 충족 가능
- 산업동원: 일부 부분 외 대부분 동원소요 충족 가능
- 전투장비 및 탄약 등의 생산능력 부족

※동원역량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정부차원 지원대책 미흡(보상제도)

V. 물자동원업무 실태 및 발전방향(4/6)

물자동원 실태/문제점

● 가용자원면

- 수송·건설·통신동원: 대부분 소요 충족 가능
- 산업동원: 일부제외, 대부분 전시소요 충족 가능, 장기전 대비 능력확보
- ※전쟁양상 변화 대비, 신규장비 동원소요 제기 및 생산능력 확보 필요

● 동원준비태세 유지 및 계획시행면

- 동원지정 장비와 업체에 대한 정부차원 보상 미흡, 일방적 희생 요구
- 원부자재 업체 비축 저조에 따른 전쟁초기 군 소요 충족 어려움
- 산업동원 일부 품목 생산기간 장기화에 따른 군 소요 충족 곤란
- 전쟁양상 변화 대비, 신규장비 및 물자 등의 생산능력 강화 요구

※ 물자동원 발전 요구사항

- 한반도 전장환경 반영: 핵·WMD 대비, 장비 및 물자 충족(민소요 포함)
- 최근 전쟁양상 반영, 장비 및 탄약 생산 등의 생산능력 조기 확보
- 개전초기 부족 전투 긴요 장비와 물자 및 장기화 대비, 신속동원 방안
- 동원지정 자원 및 업체 등에 대한 조기보상으로 전쟁초기 대응력 강화

V. 물자동원업무 실태 및 발전방향(5/6)

물자동원 발전방향

● 공통

- 평시 동원지정 장비 및 업체 소유주에 대한 보상 도입
 - 동원령 선포이후 사후보상에서 동원과 동시 일부 또는 전액보상 방안 검토
 - 일부보상: 수송, 건설, 통신동원, 산업동원(전투장비/탄약생산 부분)
 - 전액보상: 산업동원 분야 중 물자분야(유류, 식량, 피복 등)
- ※신속한 동원 보상은 전시 군 동원소요를 충족하는데 긴요

● 수송·건설동원 분야

- 정전 대비, 병력과 장비 및 물자 수송용 디젤 기관차 적정대수 확보
- 수송장비+건설장비 정비업체 패키지화, 근접 정비지원 방안 검토

● 통신동원 분야

- 인공지능(AI) 분야 및 군집위성 생산 및 운용, 저궤도 위성관련 업체 등 군 통신 관련 업체 동원지정

V. 물자동원업무 실태 및 발전방향(6/6)

물자동원 발전방향(계속)

● 산업동원 분야

■ 북핵·WMD 및 최근전쟁 양상 반영, 산업동원 품목 및 업체 지정

-드론 및 로봇, 위성통신 장비, 화생방 장비/약품 등

※일부 장비 및 약품 등은 평시예산으로 확보, 일부는 산업동원계획 반영

■ 전투장비와 탄약 등의 산업동원여건 보장 방안 강구

-원부자재 지원방안: 업체의 원부자재 비축 부족분 해소 정부대책 검토

·조달청 보유 정부비축 금속 중 장비 및 탄약생산 필요 금속 지원

·업체보유 및 시중유통 금속 등의 정부차원 단계적 지원계획 수립

-보상체계 개선: 업체의 초기생산 및 생산지속을 위해 자금 신속 지급

·장비와 탄약생산 촉진을 위해 사후보상에서 동원령 선포시 조기보상

·물자는 동원과 동시에 전액보상

-기술인력의 조기 최대 확보방안 강구: 방산업체 근무인원 활용

·업체 퇴직인원 중 전시 자원인력 또는 재고용(인력조기 확보)

-호황중인 방산업체 장비/탄약 생산라인 유지: 초기생산 여건 확보

VI. 결론 및 제안

결론

- ★ 군사작전만으로 궁극적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 NO
- ★ 전투/군사작전은 군, 전쟁은 정부와 국민이 한다!!! YES
- ★ 현재의 국가비상대비체제와 계획으로는 전시 폭증할 수 있는 비상
대비 수요 조치의 어려움으로 혼란 불가피
- ★ 국가비상대비업무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경제/이념적 논리가 아닌 당면하는 안보위협과 현재의 문제점 해소 차원의 접근 필요
- ★ 물 **국가비상대비계획 작성 및 정부연습 실시 50여년 경과** 안보환경 및 전쟁양상 변화 등의 대비 전반적 개선 필요

VI. 결론 및 제안

제안

- ★ 전시대비 비상대비 분야 필요한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추진
- ★ 북핵 등 안보환경의 심각성 대비, 국가비상대비 조직 강화
- ★ 전쟁기간 및 단계를 반영하는 국가비상대비계획 전반적 작성 보완
- ★ 핵심과업 중심으로 한반도 전장상황 반영 사태조치계획 보완
- ★ 정부연습을 통한 취약분야 발굴 및 대비 능력 강화
- ★ 물자동원 능력 강화를 위한 산업동원 분야 필요한 조치 검토

‘자유와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명심

(LIBERTY AND PEACE IS NOT FREE)

END